

통합 반대파, 전당원 투표 저지 나서

〈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투표 실행될 경우 결과 발표 말아달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반대파가 안철수 대표 측이 추진 중인 전당원 투표 저지에 나섰다.

통합 반대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다.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지하고 민약 투표를 실행할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당 당규에 주요정책과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당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하며 이 유효투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최소투표를 기준 없이 당 대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과연 그것이 당내 총의를 모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측은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통합과 재신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다. 100명이 참여해도 51명이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본부 측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사례를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투표율은 25.7%로, 개표기준 투표율인 33.3%를 넘지 못해 개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본부 측은 “오 전 시장 사례가 (전당원 투표 사례와) 너무 똑같다. 주민투표법에서 투표권자 3분의 1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 당원 모임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를 대리해 한용(왼쪽)은 평갑 당협위원장, 홍훈희 강남갑 당협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는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합만으로는 안 대표의 일방적 쪽지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최종결정 기구인 전당대회 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27일부터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당 중앙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28일 케이 보팅(온라인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통합 반대파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전당원 투표 추진 절차의 당위성을 지적하는 물론 보이콧, 법적 대응 등 실효 저지에 나서 당내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뉴시스

靑, 탄저백신 도입보다 해명… “치료용”

청와대는 24일 탄저균 감염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 500여명이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완료했을 것이라는 한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 및 국민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을 도입완료 해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청와대 식구들, 탄저균백신 수입해 주시겠습니까’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를 위한 백신을 수입했고 500명이 접종을 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설사고 이후로 탄저균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탄저균 테러에 대비한 치료 목적으로 백신 구입을 시행하게 됐다”며 “국내 임상실험이 시행되지 않아 부작용 등을 우려해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언론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했고, 매우 악의적인 해석으로 현 정부와 청와대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거쳐 탄저균백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은 맞지만 청와대 근무자들에게 실제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탄저 백신 도입은 2016년 초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실(현재 경호처)에서 추진했으며 올해 예산에 반영돼 이뤄졌다.

지난 7월 경호처에서 식약처에 백신 구매를 의뢰했고, 식약처 주관의 희귀 의약품 도입위원회에서 탄저 백신 수입을 승인해 도입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달 2일 탄저 백신 350 도스(치료용 350인분)의 도입이 이뤄져 국군 모 병원에서 보관 중이다. /뉴시스

국방부 “병영 사고건수 2014년 대비 대폭 감소”

국방부는 2015년부터 시작된 병영문화혁신 추진 결과 올해 발생한 군 사고가 혁신 추진 전인 2014년과 견줘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 성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영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2014년보다 68% 감소했다. 병사의 자살사고는 43%, 군무이탈은 31%가 각각 줄어 들었다.

군은 지난 2014년 4월 군부대 내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혁신 TF를 구성하고 2015년부터 과제별로 불합리한 관행과 군내 부조리 척결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근절해야 할 군내 폭력과 부조리 문제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올해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추진 3년이 되는 올해는 지난 10여년간 3년 주기로 나타났던 군내 대형 악성사고 발생의 연계를 끊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이뤄진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병영문화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방부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당시 설문조사에서 일반 응답자들은 병영문화 개선 분야에서 92.3%, 장병 인권보장 분야에서 71.4%를 각각 긍정 평가했다.

국방부는 2018년을 ‘병영문화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한 병영혁신 업무 추진 병영정책 전담부서 개편 등 병영문화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22일 주관한 병영문화혁신 추진 평가회의에서 “현재 병영문화혁신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됐으니 이젠 기반 위에서 어떻게 장병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주당 “제천 참사, 예방책 마련 ‘안전 대한민국’ 기틀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주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화재 사고가 인재였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철저한 원인규명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춘진 위원장, 환경봉사대상 정치부문 대상 수상

행복전복만들기에서… 환경사랑과 이웃사랑 실천 공로 인정 받아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사진)은 지난 22일 양지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복전복만들기 주최, 2017 환경봉사대상 정치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2017 환경봉사대상



은 행복전복만들기가 올 한해 환경사랑 실천운동과 사랑의 봉사를 실천한 각 분야 공로자의 선발 및 표창을 통해 범도민적 사기진작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상식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새만금 갯벌 살리기 등 환경자킴이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연탄봉사,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우리사회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환경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보전은 어느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닌 우리 도민 모두가 더불어 생각하는 유대적인 주체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과 친환경 생활양식 정립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한데 모으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립세종로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